

문재인 대통령 공약 '혁신도시 한전공대 설립' 난기류

교육부, 법인 설립 인가 두 차례 보류 이어 또 심의 연기

석달째 서류 보완 요구...2022년 3월 개교 차질 불가피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가 오는 28일로 예정됐던 한전공과대학교(가칭) 법인 설립 인가 심의를 또 다시 보류하고 다음달로 연기하면서 2022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우려된다.

26일 교육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당초 오는 28일 한전공대 법인 설립 인가 심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한전공대 설립 준비위원회 측에서 제출한 일부 서류

가 미비하다고 판단해 심의 일지를 다시 연기했다.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외부인사인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나, 위원 명단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설립 인가는 참석 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되지만, 심사위는 서류 가운데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한전 측에 한 번 더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보완 서류가 접수되면 다음달에 심사위원 전원회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설립심사위는 앞서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도 각각 서류 보완이 필요하며 설립 인가를 보류했다.

이로써 심사위가 세 차례나 결정을 미루면서 당초 목표로 했던 개교 시점까지는 채 2년도 남지 않아 한전공대 설립을 염원하고 있는 광주·전남 시·도민들이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전 측이 대학 설립 인가에 필요한 서류를 심사위에 제출하였으나, 이 가운데 재원 마련 근거의 구체성이 부족해 보완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교육부가 인가를 미루자 한국전

력은 오는 28일 이사회를 열어 대책을 마련한다.

한전 측은 일단 심사위가 요구한 자료 보완을 위해 법인에 출연할 구체적인 재원 마련 근거를 논의할 뒤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관계자는 "28일 이사회는 교육부가 요청한 한전공대 재원 마련 근거 등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보완된 서류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에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전 이사회는 한전 재산을 해당 법인에 출연하기로 의결하고 총사업비 6천 200억원(장정) 중 1단계로 600억원가량을 출연할 계획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부 심사위가 또

제동을 걸면서 일각에서는 2022년 3월 개교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한전 측은 이미 지난해 말 캠퍼스 설계를 발주했고, 내부적으로 총장과 교수 선발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가는 등 설립 인가를 제외하고는 일정에 차질이 없는만큼 2022년 3월 개교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한전공대는 학생 수 1천명(대학원 600명, 학부 400명)에 교수와 연구진 100명 규모로 글로벌 우수 공과대학을 지향한다.

대학 설립 예정 부지는 광주·전남혁신도시와 인접한 나주시 빛가람동 부영CC 부지 120만㎡다.

김경서 기자



중국인 유학생 입국지원 안전 패키지 일명 '우한 폐렴'이라고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광주 동구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외국인 유학생 입국자들에게 공급할 예방용 물품을 포장하고 있다. /광주 동구청 제공

전남지역 수산업 '빛좋은 개살구'

작년 생산량 늘어 전국 58%
금액은 되레 감소 39% 불과

전남도는 2019년 도내에서 192만t의 수산물 생산량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국 생산량의 58%를 차지하는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26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발표된 어업생산통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지역 수산물 생산량은 2018년보다 8만t이

늘어난 192만t으로 전국 생산량의 58%를 기록했으며, 생산액 규모로는 202억 원 감소했으나 2조 8천 468억 원으로 전국 생산액 가운데 39%를 차지한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지난해 김과 다시마 등은 작황 호조로 생산량이 증가한 반면 전복과 조피볼락, 참조기 등은 가격이 하락해 생산액은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업별 현황을 보면 △'양식어업'은 지난해 보다 8만t(4.7%) 늘어난 17만t 1조 7천 399억 원을 기록했으며 △'어선어업'은

100여t(0.1%) 늘어난 15만 6천 9천 322억 원, △'내수면어업'은 400t(0.4%) 감소한 9천 2천 105억 원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종별로는 △'김' 생산량이 47만t으로 지난해 보다 1만 2천t 증가했으며, 생산액은 255억 원 감소한 4천 521억 원이다.

또 △'미역' 생산량은 48만t으로 1만 7천t 감소했으나 생산액은 360억원 증가한 1천 629억 원을 기록했다.

이 밖에 △'전복' 생산량은 1만 8천t으로 2천t 감소해 생산액 역시 168억원 감소한 5천 835억원으로 조사됐으며 △'넙치' 생산량은 1만 8천t으로 5천t 증가, 생산액은 101억원 증가한 2천 355억원이다.

허성은 기자

어린이집 오늘부터 전면 휴원

다음달 8일까지...코로나19 예방 위한 조치

정부가 일명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기세를 꺾기 위해 어린이집 폐쇄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립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열흘동안 전국 모든 어린이집을 휴원한다고 밝혔다. 우한 폐렴 추가 감염자를 막기 위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일주일 연기한 데 이어 어린이집까지 문을 닫으면서 아동·청소년의 이동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영·유아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방역 목적상 최대한 이동을 자제시키기 위한 선택"이라며 "아동들의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다면 어린이집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어 "단기간이지만 환자 발생 추세를 최대한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일단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열흘로 했지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휴원하더라도 당번교사를 배치해서 긴급보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긴급한 조치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보완책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휴원을 하더라도 반드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부모가 계속 것으로 본다"며 "당장 27일부터 시행되는 급한 조치이기 때문에 아파적이지 않은 가정에서 돌봄 공백을 호소하리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긴급보육을 사용하는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긴급보육 시 교사는 평소대로 출근하고, 급식과 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해야 한다.

특히 긴급보육 기간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보육실 내 교재·교구 등은 매일 1회, 출입문 손잡이 등 빈번 접촉 부분은 수시로 소독하는 등 감염병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10~20% 정도가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된 이후 전국 어린이집의 75%는 이미 휴원 상태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 등에서는 이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휴원 명령을 내린 상태이며, 현재 휴원 중인 어린이집에서도 긴급보육은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집 일괄 휴원에 따라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돌봄비를 집으로 부를 수 있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김윤호 기자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 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된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